

환율전쟁 – ‘고부가가치화’로 뚫어라

원화강세 국면을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해야

기업은 환율갈등과 통상마찰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보수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무역보복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가격 덤펑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종 업체들이 협력해야 한다. 또 위안화·동향에 계속 신경을 쓰는 한편 단기간에 큰 폭의 조정을 받는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한국경제는 투자와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수출이 경기를 지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생산성 등 여러 분야에서 실제의 실력에 비해 많은 이익을 내고 있으며 이는 상당부분 환율의 도움을 받은 수출호조 덕이라고 분석한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에서 환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포커스에서는 점증하는 국가간 환율갈등의 전모와 배경,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을 살펴본 후 어떤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알아 보도록 한다. 벤처경영자들의 수출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환율전쟁의 배경—미국의 사상최대 무역적자

지난 9월 20일 G7정상회담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유연한 환율제도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G7 성명 채택 직후 엔화는 115.2엔/달러(9월 18일)에서 111.0엔/달러(10월 6일)로 급변했고 유로화 역시 같은 기간 1.13달러/유로에서 1.17달러/유로로 급격히 변동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환율 압박이 심각한 수준의 것임을 증명했다.

미국과 유럽의 환율절상 요구에 대해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단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IMF총회에 참석했던 진런칭 중국 재정부장은 9월 22일 “위

안화 고정환율제는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부합한다”고 발언했고, 다니가키 신임 일본 재무상도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움직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입을 할 것”이라며 환율절상요구의 예봉을 피하고자 했다.

이러한 국제 사회간 환율갈등의 배경은 무엇일까.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이 사상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 수 있다.



미국의 2002년 무역수지 적자는 4,703억 달러로 연간기준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GDP 대비 무역수지 적자비율이 4.5%를 넘어 미국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인 3%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은 동아시아국가들에 대한 통화의 평가절상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무역수지 적자액의 42.5%가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4개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했고 그 폭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2004년 선거를 앞두고 제조업 등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의 압력이라는 ‘정치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내수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오로지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 회복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수준에서 압박을 피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해 왔다는 약점이 있고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외환보유고는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또 동아시아 국가들은 보복관세, WTO제소 등 미국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원화강세 전망—정부와 기업의 대응책 마련 시급

2004년 엔화와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일본의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인해 엔화의 강세 정도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당국이 현재의 환율제도를 고수한다는 입장은 거듭 피력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중국 위안화는 2004년 이후가 되어서야 소폭 평가 절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유변동환율제 도입이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2008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점치고 있어 그 사이에 무역대상국들의 환율변화를 가중평균하여 환율을 정하는 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원화는 엔화 등과 함께 달러화에 대해 동반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북핵 문제가 다시 부각되지 않는다면 달러당 1,100원 밑으로 떨어지는 원화강세 상황도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원/엔 환율은 10.3원을 기록하고 있어 원화보다 엔화 강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일본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일본에 비해 높은 한국의 물가상승률 등 몇 가지 요인이 반영된 것이다.

원화 강세는 우선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성장둔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원화의 여파가 매우 직접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화가치가 6% 절상되었을 경우 무역수지는 18.6억 달러로 악화되었다. 수출은 8.4억 달러 감소했으며 수입은 10.2억 달러 증가했다. 또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해외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서비스 수지도 악화되었다. 2003년 7월에 6.9억 달러를 기록한 여행수지 적자액은 8월에 들어서도 6.7억

달러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되,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은 자제해야만 환율조작국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제상황과 물가

2004년 주요 환율 전망(평균기준)

	2002년	2003년			2004년	2004년 절상률 (2003년 대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원/달러환율	1,250	1,205	1,155	1,180	1,110	6.3%
엔/달러환율	125.2	118.7	114.6	116.7	108.0	8.1%
달러/유로환율	0.94	1.11	1.13	1.12	1.15	2.7%
위안/달러환율	8.277	8.277	8.277	8.277	8.00	3.5%

상승률 차이, 통화가치 절상의 충격흡수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원:엔 비율이 10:1 이상의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수출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유망 수출기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셋째, 경기대책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강화하여 원화강세로 인한 경기의 추가하락을 막아야 한다. 넷째, 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기업 유치에 준하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실시하는 등 차별적인 대응으로 산업공동화 문제에 대처해 나간다. 다섯째, 원화강세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는 수출을 지양하고 신제품 개발과 소프트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등의 활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엔화 시절 일본 기업들의 대응 사례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은 환율갈등과 통상마찰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보수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무역보복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가격 덤핑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종 업체들이 협력해야 한다. 또 위안화 동향에 계속 신경을 쓰는 한편 단기간에 큰 폭의 조정을 받는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즉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급격히 조정되고 마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세계 환율갈등의 배경과 그 영향』,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